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
안 소장

1. 생태적 전환과 불평등 완화

1.1. 탄소배출량이 많은 경제는 성장에 불리하다는 점은 IMF나 World Bank도 말한다. 이러한 진단은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탈탄소기술의 시장형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탄소중립 문제가 성장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멸망이나 지속인가 문제라는 점이다.

1.2. 적어도 10년 전부터 OECD와 IMF는 소득이 불평등한 경제보다 더 평등한 경제가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평등과 생태적 전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성장이 아니라 성장 감소의 가능성이다. 소득이 평등하면 할수록 탈성장을 감당할 여지가 있다. 생태적 전환은 불평등의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생태적 전환이 탈성장을 의미하든 다른 방식의 성장을 의미하든,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불평등의 완화는 필수 조건이다.

1.3. 신자유주의는 중산층을 몰락시켰고,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위소득의 차이가 미미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혁명과 자동화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시킬 것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탈빈곤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복지제도만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

1.4.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기본소득은 전체 소득 구간의 격차를 줄인다. 예를 들어 t%의 비례세를 도입하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지니계수는 t%만큼 줄어든다. 누진세의 경우 지니계수 개선 정도는 더 커진다. 민간소유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소유를 늘리며 공공소유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경우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조합과 기본소득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2.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이다. 탄소기초가격을 정하는 탄소세와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바꾸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시장확산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들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가 유럽과 미국에서 확대되었다. 이는 전환적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2. 탄소세는 민간의 탈탄소 혁신에 기대하는 정책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반면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는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공공투자 정책의 문제점은 혜택을 사기업들이 독차지한다는 점이다. 만약 공공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분권을 가지며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면 공공투자는 자산소유 전체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3. 탄소세와 탄소배당

3.1.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세금이며, CO₂ 환산 톤 당 일정액을 과세한다. 탄소세는 유럽대륙의 16개 국과 캐나다에 도입되어 있다. 탄소세는 탄소기초가격을 결정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생산품들은 가격경쟁력을 잃는다. 탄소세의 문제점은 세금이 최종소비가격에 전가되고 물가가 올라가며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탄소세는 역진적이다.

3.2. 탄소세의 수입을 탄소배당으로 사회구성원에게 되돌려준다면, 탄소세가 도입되더라도 구매력의 약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세율을 사회적 저항 없이 인상할 수 있다. 세율의 인상은 기업들의 탈탄소 경쟁을 촉진한다.

3.3. 탄소세 도입과 탈탄소 기술의 보편화에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탄소배당은 탄소세는 도입되었으나 탈탄소 기술은 아직 채 보편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탄소배당은 소비자의 구매력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세율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연동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간 탈탄소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탄소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다. 스위스는 탄소세수의 2/3를 배당하며 캐나다는 90%를 배당한다.

4.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공투자와 사회구성원의 공유지분

4.1. 탄소세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의 탈탄소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만으로 탄소중립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기에는 205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인내자본을 제공하고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른 신속한 에너지 전환이 요청된다. 유럽과 미국은 이 점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정책은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녹색자본주의로 바꿀 수 있지만 사적 자산소유의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완화되지 않거나 더 커질 수도 있다.

4.2. 장차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탈탄소 기술에 공공투자를 제공하고 지분을 획득하여 그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구성원 모두의 자산이 늘어나고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5. 총정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조합

에너지 전환을 위해 두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 하나는 탄소배당과 결합된 탄소세 도입이다. 세율은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에 연동하여 전년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인상한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이며, 공공투자 지분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